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· 민변 사법센터

수 신	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
발 신	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(담당 : 김태일 팀장 02-723-0666 jw@pspd.org)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
제 목	[보도협조요청] 검찰개혁 역행·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(8/17 오전 11시, 용산 대통령실 앞)
날 짜	2022. 8. 12. (총 2 쪽)

보 도 협 조 요 청

검찰개혁 역행·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

일시 장소 : 2022. 8. 17. (수) 11:00, 용산 대통령실 앞

1. 취지와 목적

- 법무부가 12일(금),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.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으로 확대 재정의함으로써 검사에게 사실상 법 개정 전과 별 다를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띄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이는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·조직적으로 분리하여, 경찰과 검찰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고 범죄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 및 기소권의 과도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과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처사입니다. 아울러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 시행령으로 재확대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.
-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설치한 데 이어 최근 조세범죄합동수사단,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와 같은 합동수사단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우회하여 국세청, 관세청, 금융감독원,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 및 협력받는 형태로,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정부기관의 정보기능까지 결합시키고 있어 검찰권력 확대 및 권한 오남용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이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확장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이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(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)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(소장 장유식 변호사)는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전방위적 검찰권 확대를 규탄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

2. 개요

- 제목 : 검찰개혁 역행·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
- 일시 및 장소 : 2022. 08. 17.(화) 오전 11:00 / 용산 대통령실 앞
- 공동주최 :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,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
-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자
    - 사회 :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
    - 주요 참석 예정자
        -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
        -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/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
        -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
        -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

  ※ 참여자 및 발언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- 문의 :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(담당 김태일 팀장 02-723-0666)

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